전북특자도 특별법 '이민 권한 광역 이양 특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산업 인적기반 조성 · 생활인구 확대
'전북이민비자' 신설 생명경제 도시 기반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 가운데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 비율 71.4%로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다. 지방소멸, 나아가 광역소멸 위기의 한 중심에 서있는 전북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을 신설해 정부 이민·비자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나아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제25조)는 현재 파견법에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32개로 한정됐던 것을 식품제조 가공업 및 포장, 식육 가공업 등 농생명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업종도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민자 확대를 위한 특례(제89~91조)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확대하며, 유학생의 부모·배우자에게도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제92조)는 지역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이민비자 정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이민비자'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민자격 기준·범위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제93조)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모집·입국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실정을 반영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확보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저숙련 비자 취업(E-9)이 향후 고숙련 기술인력(E-7)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등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안정적 인력공급을 통한 선제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새만금 사업지역 내국내·외 근로자의 원활한 확보와 고용안정, 기업 활동에 필요한 고용유지를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 특구 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제94조) 또한 특별법에 담았다.

이밖에, 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제95조)는 현재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5개 기관을 지정해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전북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체류자격 지원시설을 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민 단장은 또 "전북특별법은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장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전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나도록 혁신과 도전 정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온·오프라인 백만인 범도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홍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본심사를 진행하고 도민 부문 6건, 공무원 부문 6건 총 12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은 도민 부문 시상식(왼쪽)과 공무원 부문 시상식.

'도민 생각, 정책 씨앗으로'… 도, 도민·공무원 우수제안 선정

고향사랑기부제 · 특자도 특례 발굴 제안 공모
도민 분야 금상에 '돌바(돌봄+바이오)주세요'
공무원 금상 '보전산지 변경 · 해제 특례' 선정

도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본심사를 진행하고 도민 부문 6건, 공무원 부문 6건 총 12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 방안'과 '더 특별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 발굴'을 주제로 공모해 총 158건(도민 107건, 공무원 5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심사를 통해 14건의 우수제안(도민 6건, 공무원 8건)을 선정했다.

본심사에 앞서, 제안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사이트를 활용해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심사점수에 반영(10%)했다.

이날 영예의 도민 부문 금상은 윤희정씨가 제안한 '돌바주세요(돌봄+바이오)'이다. 답례품으로 건강, 식단 등 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단 구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돌봄(가족+반려동물) 영역 확대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자는 제안이다.

공무원 부문의 금상은 신민경 주무관이 제안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한 특례'이다.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등의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이양하자는 제안으로 지역의 산림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전이 가능할 특례로 평가됐다.

도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2건의 과제들을 관련 부서의 검토 및 보완, 구체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모금액은 37%"

민주 윤준병 의원

지난 2015년 농어촌과 공공·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액이 60% 이상이고, 민간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액은 전체 기금의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뿐인 '농어촌상생협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14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현재 기준(목표액 7,000억원) 대비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원으로 전체 62.8%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173곳)은 792억원(36.9%)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액도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제 2019년 225억 9,300만원을 조성한 것에 이어, △2020년 375억9,500만원(전년 대비 66.4% 증가), △2021년 455억2,500만원(전년 대비 21.1% 증가) 등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조성액은 354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어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커지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민간부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저조한 기금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윤수봉 · 문승우 도의원, '새만금예산 살리기' 릴레이단식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과 윤수봉 의원(완주1)이 4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문승우·윤수봉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 삭감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전라북도를 지방정부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북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투쟁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전북도와 정치권, 500만 전북인이 하나로 뭉쳐 전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5,147억원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심의 단계에서 마땅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